

혁신당·진보당 약진...민주당, 더 이상 '경선=당선' 아니다

재보선 이후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덧발'인 영광·곡성을 사수하면서 체면치레는 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처받은 승리'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한 '안방'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민주당에 대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역 민심의 '경고'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비서진들이 총동원돼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의 덧발인 전남에서 초반 돌풍을 일으키면서 본선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호남에서 '민주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본선에서 야당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41.08% (1만2951표),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72% (9683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26.56% (8373표), 무소속 오기원 후보 1.62% (512표)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4만5248명 중 70.1% (3만1729명)가 투표했는데 1위와 2위 간 격차는 3268표 차이였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당, 영광·곡성 '상처 받은 승리' 지방선거 앞 덧발 정치개혁 과제 혁신·진보 '젓갈씨'에 희망 살려

비록 영광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양 당의 득표를 합계가 60%에 육박하면서 민주당의 간담을 서늘게 한 셈이다.

민주당이 이번 재선거를 통해 '덧발 수성'은 이뤄지지만, 지역 민심과 지역 정치개혁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번 재선거를 통해 영광·곡성에서 사실상 바닥 민심을 다지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도 '덧발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호남 민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며 "선거 기간에 당선자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민주당만이 아닌 다양한 정당 선택지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민주당이 못하면 언제든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민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논란 전남도교육청 '저조한 수능 성적' 지적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국 최하위권인 학생 수능 성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 의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고교 동창인 A씨를 감사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오해받을 수 있겠다는 고민을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동창이 지원해 받아왔고 할 수 있으면 마음속에서라도 우호적 평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사무관에게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해 결국 3등을 2등으로 만들어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교육감은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하게 읽지 않았다. 보고는 받았다,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받

을 때 알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남지역 학생들의 70%가 수시로 진학을 하고 있다"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EBS와 연계해 수능 시험과 유사한 훈련을 하고 학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도 화두로 올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전망과 발생 현황을 살

펴보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4년을 기준으로 최대 6조 6000억원, 최소 1조 9000억원의 구독료가 소요된다"며 "광주는 2095억 1700만원, 전남은 2254억 35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재정의 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은 마련돼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 광주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주시길 것"이라고 답했고 김 전남 교육감은 "본격적인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선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회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에서 2학기 넘게 연속적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다. 채택 여부는 총장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학칙 개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의대생 휴학이) 동맹 휴학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정 총장은 "동맹 휴학이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면서 휴학한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코바나·공흥지구·명품백·도이치 모두 '무혐의' 명태균 파장도 확산... "뵈주기 수사" 거센 비판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 파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달았던 만큼 검찰의 결론으로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형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달리 도이치 사건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미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결국 '뵈주기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 사법 리스크의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같은 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역시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똑같이 처분한 바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력이 투입된 두 사건에 대해 보름 사이에 연달아 사법적 족쇄가 풀어진 셈이다.

하지만 법적 결론과 별개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뚜렷함에도 법리적으로 처벌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음에도 주범 격인 권오수 회장에게 이용됐을 뿐이라는 것이 수사 결론의 요지다.

이런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